【22년 채용시험(3.26) 경찰학】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정답 ④

- ① (X) 3·1운동을 기화로 1919년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였고, 1925년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다. 【일본법을 가져온 **유치**한 법】
※ 아두스 경찰학 70, 72 페이지, 동형모의고사
- ② (X) 미군정기에 **비**경찰화가 진행되어 **위생**업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고, **경제·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비위생** 경고 폐지】
※ 아두스 경찰학 74 페이지, 동형모의고사
- ③ (X)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시 치안국장에게 치안정감 계급을 부여, 경정과 경장 계급 신설, 경감(경정X) 이상에 계급정년 도입 【**‘자’**으로 끝나는 **계급 신설**】
※ 아두스 경찰학 76 페이지, 동형모의고사
- ④ (O) 1974년도에 영부인 **즉사(74)** 후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하고, 2006년도에 제주 자치경찰단을 창설하였다. 【**시민과 공유(06)**하는 **자치경찰 창설**, 동형모의고사

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법」상 경위(警衛)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 ②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③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④ ‘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 ④ (X) 관할에는 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관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물관할은 ‘사무관할’**로서, 사무의 범위를 설정한다.
※ 아두스 경찰학 24 페이지, 동형모의고사

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한 슈테판 푸터(Johann Stephan Putter)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 ③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유지하기 위하여 신민(臣民)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 ④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시켰다.

정답 ②

- ① (O) 1776년 푸터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 위협의 방지며 적극적 복리증진은 경찰의 임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 ② (X)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은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복리증진을 위한 조치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경찰은 절박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1794)에 부합하는 판결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개별적 수권조항이 아닌 일반적 수권조항에 위반된다. 제국경찰법은 16세기 제정되었고 경찰의 개념을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였으므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다. 법전과 판례의 순서 : 「제국경찰법 - 일반란트법 - 죄와형벌법전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 지방자치법전-경찰행정법」【**제일죄 크(클)지경**】
※ 아두스 경찰학 14, 15 페이지, 동형모의고사

4.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위험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 ② 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 ④ 위협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협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협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정답 ④

- ④ (X) 위협의 혐의는 위협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로서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 개입이 가능하고, 위협이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 조치만 가능하다.
※ 아두스 경찰학 22 페이지, 동형모의고사

5. 경찰의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Dirty Harry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함과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이다.
- ②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형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 ③ 셔먼(1985)의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개념은 작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경찰관들이 결국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④ 전채사회가설은 신임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정답 ④

- ① (O) Dirty Harry 문제 : 크로카스(Carl Klockars, 1983)는 당시 유명한 유괴영화인 ‘Dirty Harry’를 인용하여 ‘고결한 명분의 부패형태’를 제시하였다. 영화에서 경찰관 Harry는 유괴된 소녀를 찾기 위해 유괴범 Scorpio의 다리

【22년 채용시험(3.26) 경찰학】

에 총을 쏘며 고문을 하였다. 크로카스는 선한 결과를 위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찰관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X) 신인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에 의하여 사회화된다
는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다.
* 아두스 경찰학 31 페이지, 동형모의고사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정답 ②

- ② (X) 사적 이해관계자는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자이며, 신고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아닌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
* 동형 모의고사

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무원의 8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 1회에 200만원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 ③ (O) * 아두스 경찰학 52 페이지, 제10회 모의고사 9번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④

- ④ (X)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3년인 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3년, 비상임위원 2년)이며, 경찰위원회(국가, 자치)는 연임이 불가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아두스 경찰학 466 페이지 종합편, 동형모의고사

3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③

8.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행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 ④ 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정답 ②

- ② (X)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할 수 있다. 19세 이상으로 규정된 것들을 모아보면, 운전면허 자격요건으로 특수면허, 대형면허는 19세 이상으로 운전경험 1년 이상인 경우이고, 국민감사청구,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유흥접객원 등이다. 【특대감 보유】다만, 2022. 7. 5.자 개정법률 시행으로 19세는 18세로 변경되었다.
* 아두스 경찰학 288 페이지, 아두스 최종마무리 126 페이지(두문자 변경)

9.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서 각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 ② (X)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며,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만 설치되고 경찰서에는 설치되지 아니한다. 자문기관으로는 **고충위, 인사위, 인권위**가 있다. 【자색문으로 고인인(Go in in)】
* 아두스 경찰학 466, 468 (위원회 종합편)
- ④ (O) 인권진단은 연 1회 이상 대상 경찰기관을 방문하여 진단한다.
* 동형 모의고사 제9회 5번,

5. 「경찰 인권보호규칙」(경찰청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22년 채용시험(3.26) 경찰학】

정답 ①

낙인이론은 공식적인 낙인이 그 행위자를 사회와 기회로부터 소외시켜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으로 1차적 일탈보다는 2차적 일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아두스 경찰학 260 페이지

13. 뉴먼(1972)은 방어공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의 구성요소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 행동의지를 보여줌
(나)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함
(다)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임

<보기 2>
㉠ 영역성 ㉡ 자연적 감시
㉢ 이미지 ㉣ 환경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뉴먼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에 대한 4가지 관점

자연적 감시	자연적 가시권의 확대
이미지와 환경(milieu)	① 이미지 :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주변 시설을 정리하거나 유지 보수하여 주민들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쉬운 범행대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미지 형성 ② 환경 : 통행로, 마당, 놀이터, 주변거리 등을 방범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영역성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표시 및 주민의 소유의식 확대로 주민들이 자신의 영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21경제>
안전지대(지리적 병치)	주거환경은 주변이 우범지역인지 안전지역인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자이(아파트) 환영안】

※ 아두스 경찰학 263 페이지

14.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 ②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 함으로써 상·하계층 간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상관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할거주의'는 타기관 및 타부처에 대한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조정·통합의 원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답 ④

④ (X) 할거주의는 자신의 소속에만 충실하여 다른 조직과 협조가 곤란한 것을 의미한다.

※ 아두스 경찰학 187 페이지

1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 임용될 수 없다.
-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 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③ (X)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명부에서 삭제된다.

※ 아두스 경찰학 122 페이지

④ (O)

※ 동행 모의고사

29.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 시 제2평정(주관) 요소들에 대한 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④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16.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당 결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나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②

㉠ (X) 자격증의 효력 상실은 객관적 사유로서 동의를 필요없다.

㉡ (X) 복직하지 아니한 사유는 동의를 필요 없다.

※ 아두스 경찰학 127 페이지

동의 불요 (19승진)	직제 개편/예산 부족(정원조정) 휴직 후 직무 미복귀(복귀거부) 자격증/면허 취소(자격증 취소) (객관적 사실) 【정복자】
--------------------	---

17.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22년 채용시험(3.26) 경찰학】

하지 않은 것은?

- ①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③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팅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 ② (X) 탄약고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전기시설 설치를 금지하며(방폭설비 갖춘 경우는 가능),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아두스 경찰학 203 페이지

18.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증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 ① (X) 예산요구서는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월 말), 예산안 편성지침(2월말), 예산요구서 제출(5월말) **【사지요-1,3,5】**

※ 아두스 경찰학 198 페이지

1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I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 ②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에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②

- ② (X)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한다.

※ 아두스 경찰학 207 페이지

20.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시·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 ㉡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과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이다.
- ㉢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휴무일 포함)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지역경찰관서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 ㉤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정답 ②

- ㉣ (X) 휴무일은 제외한다. 치안센터에는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되며, 출장소형 치안센터 중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는 근무자가 치안센터 내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형태의 치안센터를 말한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을 원칙으로 하며(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투경찰순경 상주배치), 배우자는 근무자 부재시 방문 민원 접수·처리 등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휴무일은 제외한다.

※ 아두스 경찰학 93, 274 페이지

21.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③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④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③

- ③ (X)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호송경비업무는 물건에 대한 것이고,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2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①

【22년 채용시험(3.26) 경찰학】

- ① (X)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경찰학에서 언급되는 대부분의 법률에서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사실혼이 제외된 법률혼으로만 규정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금지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배우자이다.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사실혼 포함
청탁금지법	금품수수등이 금지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가정폭력처벌법	가정구성원의 배우자는 사실혼 포함
출입국관리법	결혼이민비자(F-6) 발급대상 배우자는 사실혼 포함

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

- ② (X)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잠정조치에 해당한다.

※ 최종마무리 125 페이지, 동형 모의고사

3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 ①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 ②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반드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할 필요는 없다.
- ③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②

3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도 해당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②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 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 ③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 ④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①

- ① (X)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설명이며,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된다.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아두스 경찰학 356 페이지

25.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③

- ③ (X)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피의자의 동의없이 혈액을 채취한 경우로서 사후 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야 한다.

※ 아두스 경찰학 387 페이지

26.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22년 채용시험(3.26) 경찰학】

③ (X) '비인도적' 사유는 임의적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차이제시】

※ 아두스 경찰학 462 페이지

절대적 사유	1.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등의 이유로 처벌될 우려시(차별 우려) 2.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3. 한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4. 한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차이(나계) 제시(하면) 절대적 인도 거절
임의적 사유	1. 인도범죄의 일부가 한국 영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2. 범죄인이 한국 국민인 경우 3. 인도범죄 외의 범죄가 한국 법원에 재판 중, 집행 중 또는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4.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 등 고려하여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될 때	한국국민(에) 외재인삼 (주는 것은) 비인도적 (이어서) 거절할 수도 있다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②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①

- ① (X)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 의무) 및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준용한다(경찰법 제20조⑤).

※ 아두스 경찰학 96 페이지

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② '공고문서'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 ③ '일반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 ④ '법규문서'란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정답 ③

- ③ (X) 민원문서에 대한 설명이다. 공문서의 종류는 민원문서, 비치문서, 공고문서, 법규문서, 일반문서, 지시문서가 있다. 종류만 알고 있으면 어려움 없이 구별할 수 있다. 【민비 공법 일지】

※ 아두스 경찰학 211 페이지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정답 ③

- ① (X) 공개청구는 문서 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 ② (X)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②)
-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제17조①).

※ 아두스 경찰학 219, 222 페이지

서면과 구술

국민권익위	정보공개청구	언론중재	행정절차법
신고 : 문서	공개청구 : 말, (전자)문서 이의신청 : 문서	정보도청구 : 문서 조정신청 : 말, (전자)문서	의견제출 : 말, (전자)문서

30.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 ④ (X) 상대방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아두스 경찰학 153 페이지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22년 채용시험(3.26) 경찰학】

③ (X)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8조)

※ 아두스 경찰학 156 페이지

32.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 ㉠ (O)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 (O)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 (X)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행정상 강제에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과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미리 명할 수 없어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로 구분되며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부과등이 있다. 【집행! 대강직이】
 - ㉣ (X)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 ※ 아두스 경찰학 155 페이지

3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 ① (X)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최루탄에 포함된다.
- ※ 아두스 경찰학 172 페이지

34.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X)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각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두스 경찰학 181, 182

3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 ② 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 ③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 ④ 치명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정답 ④

④ (X) 대상자가 주먹이나 발로 위해를 초래하는 상태는 폭력적 공격이다.

【순소적폭치-허접저중고】

대상자 행위(2.1)		경찰 대응 수준(2.2)	
순응	경찰관의 지시·통제에 따르는 상태, 경찰관의 요구에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	협조적 통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
소극적 저항	경찰관의 지시·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이동 명령에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물체를 잡고 버팀	접촉 통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
적극적 저항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경찰관 손을 뿌리치거나 밀거나 끌고 침을 뱉는 행위	저위험 물리력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폭력적 공격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주먹·발로 위해를 초래하거나 임박한 상태, 강한 힘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벗	중위험 물리력	대상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

【22년 채용시험(3.26) 경찰학】

	어나려고 하는 상태		
치명적 공격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 총기류, 흉기, 둔기 등을 이용하여 위력 행사	고위험 물리력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

※ 아두스 경찰학 178

36.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보 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비례의 원칙
- ② 평등의 원칙
- ③ 신뢰보호의 법칙
-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정답 ③

③ (O) 행정기본법 제12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아두스 경찰학 최종마무리 정리 87 페이지

37.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 ④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②

② (X)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닌 경찰청장이 지원을 하며, 지원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제11조의4(소송 지원)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아두스 최종마무리정리 110 페이지

38.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운전면허
-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 ③ 한의사 면허
- ④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정답 ④

- ① (X) 강학상 허가이다. 허가는 질서유지·위험예방 등을 위하여 법률로써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후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로서, 운전면허 또는 의사면허는 대인적 허가에 해당한다.
- ② (X) 인가이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이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 준다.
- ③ (X) 허가이다.
- ④ (O) 특허는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나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강학상 특허는 실정법상으로 허가, 면허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특허에 해당한다.

※ 아두스 경찰학 150 페이지

3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 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 ③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④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정답 ①

① (X) 소송의 종류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되며,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 아두스 경찰학 228 페이지

40.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 ② 집회·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 집회·시위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③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치안 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④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 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답 ①

① (X) 영장심사관 제도, 수사심사관 제도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구대 및 파출소는 지역경찰관서로서 수사를 위한 특별한 조직은 없다.

※ 아두스 경찰학 410, 439 페이지